

시론

‘상병수당’ 전국 확대 더 늦춰선 안 된다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윤석열 정부가 시행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낮은 징행률과 저조한 의료 기관 참여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보완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병수당이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로, 직장 인뿐 아니라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특수 고용직도 포함된다.

이미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상병수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구조적인 노동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아파도 쉬기 어려운 노동 환경이 지속되면서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이 커졌다.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노동 구조에 있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과 성과 중심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유급병가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정규

직·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며 많은 노동자가 아파도 쉬지 못했다. 결국 병든 몸으로 일터에 나서는 현실은 만성질환 악화와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기후 위기와 노동환경 악화도 상병수당 필요성을 키웠다. 폭염·한파·미세먼지·화학물질 노출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면서, “아프면 회복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졌다.

셋째, 결정적인 계기는 COVID-19 팬데믹이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왜 상병수당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많은 노동자가 생계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출근했고, 자가격리는 곧 소득 단절로 이어졌다. 결국 감염병 시대에 상병수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 안전망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넷째, 의료체계의 한계도 크다.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지만, 치료 기간 생계는 책임지지 못한다. 결국 많은 환자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이는 재발과 건강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을 키우는 사례가 많아 건강 불평등도 심화됐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오래전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요구했다. 질병은 개인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위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정부 역시 노동자 건강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서울 중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 확대 여부와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 논의 자체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본격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상병수당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프면 쉬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접근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은 생계 때문에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냈고, 이후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추진 과정에서 의외의 큰 변수 중 하나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 분위기였다. 자칫 상병수당 정책이 포퓰리즘성 복지정책으로 비춰져 정치권의 경계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며 상병수당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런 노력은 충분히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상병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향해야 했던 우리 사회의 비정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이제 질병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과제다.

상병수당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정착돼 누구나 질병·부상 앞에서만큼은 생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길 소망한다.

社說

1천만명 이상 참여 가상자산 투자도 열풍이란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 수는 2025년 8월 기준 1천99만 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587만명에서 3년 만에 87.2% 급증, 1천만명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보유액도 17조6천억원에서 111조7천억원으로 6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70대 이상 투자자가 3만명에서 11만6천 명으로 3.9배 늘고, 금액도 1천902억원에서 2조3천365억원으로 13.9배 뛰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다. 2026년 2월 기준 투자자는 1천22만명으로 6개월 전인 2025년 8월 대비 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유액 역시 62조9천억원으로 37.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수는 60대 이상에서 증가해 눈길을 끌었고, 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이 약간 수그러들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1천만명을 넘어선고 수십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수준이다. 예전에는 주로 20~30대 젊은층의 참여 폭이 컸으나 모든 연령으로 확산하는 추세고 고령층의

비중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구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그 규모만 놓고보면 이미 국민적 투자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영향력이 커졌다. 주식시장과 함께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제도권 금융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최근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뢰를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편적인 규제만으론 안 된다. 디지털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공시 의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 국회도 내부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입법화가 하반기로 밀렸다고 한다.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까지 급속도로 연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제도 정비에 열중하고 있다. 명백히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할 때다. 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

여고생 대상 문자마살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귀가 중이던 여고생이 살해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고교생들이 치욕의 한 ‘문자마 살인’이 발생했다. 고교생들이 학생회나 동아리 차원에서 잇따라 집단 성명을 내며 과장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의 예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으로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고 행정·교육당국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중이다. 청와대는 경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순찰 강화, 통학로 안전진단 및 방범 시설보강 등을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지원과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현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로부터의 안

전과 피해자 보호는 기본 책무”라면서 면밀하게 살피고 보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및 성폭행 피소와 연관성 등 동기 규명에 전력하고 있다.

친구를 잃은 충격과 불안 속에서 광주를 넘어 전국 학생들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씩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영원히 기억하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한다. 사건 현장 부근의 시민 추모 공간에는 발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하겠다. 학교 주변 취약 시간대 순찰과 집중 치안 활동 등으로 두려움 없이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단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기고

마흔 이후의 창업, 나를 버티게 한 문장들



조영인 조인에컴 대표

나의 어깨 위에는 늘 커다란 가방 하나가 매여 있다. 그 안에는 노트북과 각종 기획안, 현장에서 쓸 소품들이 가득하지만, 가장 밑바닥에는 항상 책 한 권이 자리 잡고 있다. 마흔이라는 나이에 창업이라는 망망대해로 뛰어들어, 이 가방은 단순한 수납함을 넘어 내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이동식 서재’가 되어주었다. 매일 아침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길을 나갈 때, 가방 밑바닥의 책은 파도치는 일터 위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가장 단단한 평형수(平衡水)였다.

현장에서 애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하며 흔들릴 때마다 나는 가방 속에서 ‘금언(金言)’ 같은 문장들을 반추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근 내 마음을 가장 단단하게 붙잡아준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

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구절이었다. 나체가 던진 이 날카로운 격언은 단순히 서구의 철학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넘어 치열하게 삶을 개척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존을 넘어선 소명 의식을 일깨워준다.

마흔의 창업은 내게 생계 이상의 의미였다. 단순히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나만의 관점으로 지역의 잊혀가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콘텐츠로 소통하겠다는 ‘살아야 할 이유’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명확했기에 낯선 현장의 거친 파도나 거절의 순간들도 끼꺼이 감내할 용기가 생겼다.

실제로 지역의 오래된 흔적들을 기록하거나 축제 기획안을 다듬을 때, 책에서 얻은 통찰은 딱 막힌 현장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된다. 낡은 고분군 앞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자료를 정리할 때면 박경리 작가의 “슬픔도 힘이 된다”는 문장을 떠올린다. 고단한 삶의 흔적이 문은 지역의 유산들이 결코 버려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단단한 뿌리가 된다는 믿음을 그 문장에서 얻었기 때문이다. 또한 박완서 작가가 말한 “모든 것에 뜨겁게 반응하되 담

담하게 수용하라”는 가르침은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평정심의 근간이 되었다. 기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고통의 순간이나 모든 것이 안착되어 찾아오는 귀태로운 순간에도 나는 이 문장들을 이정표 삼아 다시 길을 나섰다.

여성 기업가이자 기획자로서 내가 만드는 콘텐츠와 행사는 결국 누군가의 가슴에 새로운 문장을 심어주는 일이다. 기획안이 반려되고 마감에 쫓기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가방 속 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가 읽은 문장들이 내 안에서 단단한 근육이 되어주었듯, 내가 기획한 이벤트와 책들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한 줄의 힘’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무거운 가방을 멘다. 하지만 그 무게는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게 하는 든든한 평형수다. 가방 속 책장을 넘기며 나는 확신한다. 이제 이순(耳順)의 문턱에서 되돌아보는 삶은 내가 읽은 문장들의 두께만큼 깊어져 있었다. 내가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동시에 더 용기 있을 것임을 말이다.

취재수첩

섬박람회 성공 위해 전남광주특별시민이 나설 때다



김진선 지역특집부 국장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박람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이며 성공개최를 위한 역량 결집이 절실해지고 있다.

여수는 2012년에 104개국 참여하고 820만 명이 방문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세계속에 여수’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번에는 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특화 국제박람회다. 물론 국가주도의 국제 공인박람회가 아니

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은 지자체 주도의 행사인 만큼 규모나 예산도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한다. 규모와 예산면에서 지난 세계박람회와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조직위원회와 전남도, 여수시 박람회 지원단은 박람회 주행사장을 비롯한 시설물이나 전시관 등을 총괄하며 일정에 맞춰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한다. 주무대인 진도지구에서는 랜드마크와 함께 섬의 과거·현재·미래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8개 전시관이 운영될 계획이며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섬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여수엑스포장에서는 각종 포럼 등 학술대회 및 불꽃축제 등이 연계돼 펼쳐진다.

하지만 일부에서 준비 미흡, 소홀 등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행사

장에서 이뤄지는 기존의 박람회가 아니라 여수 주요 관내 섬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기우라고 일축했다. 정부차원에서는 섬 방문의 해로 지정,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하고 전남도는 섬 반값 여행 등을 준비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기반 시설 및 콘텐츠의 준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이미 한번의 큰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낸 여수시민의 저력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젠 전남광주가 통합을 이룬 후 차르게 되는 첫번째 국제행사가 될 것이다. 여수섬박람회의 흥행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의 각별한 애정과 ‘으쌔으쌔’ 힘내라는 응원 메아리가 퍼져 나가길 기대해본다.

**그래픽 뉴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대법원 선고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정보 등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진급 청탁 대가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

2025년 11월 27일	12월 15일	2026년 1월 27일	2월 12일	5월 12일
검찰 구형	법원 1심 선고	검찰 구형	법원 2심 선고	대법원 선고
징역 3년	징역 2년, 2,490만원 추징	징역 3년	징역 2년, 2,490만원 추징	징역 2년, 2,490만원 추징 확정

12·3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 고요한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살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12·3 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올해 2월 나온 2심 결론도 같았다.

2심 역시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 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제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